

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2. 14.(금) 10:00

5 분 자 유 발 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학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강 진 희 의 원)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학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 효문, 양정, 염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의 강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북구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상습적인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자는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인장애인과 직원 여러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저 자신에 대한
성찰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행정기관의 방치, 형식적 점검을 꼬집어
말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겼나하는
자책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지난 2월 4일 울산 북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다수의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시설에서 학대 정황이 드러난 것은 작년 10월 말
이었습니다. 한 입소자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들이 시설 측에
항의하였고, 해당 시설은 자체 확인 후 11월 6일,
울산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이 시설 내 한 달간 녹화된 CCTV 영상 12개 모두를
확인한 결과, 500여 건의 학대 의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이는 20명의 생활지도원이 29명의 거주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장면이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시설 측은 지난해 11월 20일, ‘거주인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후속 조치로 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생활지도원 20명은 시설에서 거주자들과 분리한 데 이어, 폭행 사실이 확인된 3명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했고, 나머지 17명 중 2명은 퇴사, 15명은 직무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2월 11일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겨우 한 달간 CCTV 자료에서 확인된 것일 뿐,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어떻게 자행되고 은폐됐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덧붙여 ‘더 큰 문제는 거주인 학대가 일상적으로 자행됐음에도 매년 진행되는 지도 점검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데에는 행정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책자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의 목적은 시설 운영의 적정화 및 시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나와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특이 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권침해 사례는 집중 점검하게 되어있으며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위 중 1명 이상을 선정하여 이용자가 최소 연 1회 이상 인권상황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지도점검 결과에서 인권지킴이단 인권상황 점검 시 외부 단원이 점검하여야 하나 두 차례 내부 단원이 점검, 입소자 연회 이상 인권상황 점검 미실시로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시나 북구청이 특이 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자체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시설이용자 인권교육을 대상자 특성에 맞게 개별, 소규모로 교육 하지않고 2023년 110명, 2024년 128명에게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고, 직원 인권교육 또한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 교육, 대면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하라고 되어있지만 과연 중증 지적장애인에 맞는 교육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학대 사건 이후 현재 20명의 생활지도원이 빠진 상황이라 남아있는 생활지도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운영의 어려움으로 보호자에게 자택 돌봄을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시설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곧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복구청은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복구청은 매년 실시하는 지도점검이 형식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최약자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관에서 많은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